

##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와 향후 과제

정형곤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협력팀 선임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3460-1127)  
노유연 국제개발협력센터 동아시아협력팀 전문연구위원 (yynoh@kiep.go.kr, Tel: 3460-1045)

## 차 례 ●●●

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요
2.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
3. 평가 및 향후 과제

## 주요 내용 ●●●

- ▶ ASEAN+3 정상회의 틀과 연계되지 않은 역내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 연속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역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 틀 안에서 3국 정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음.
- ▶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협력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사안들이 보다 가시화되면서 한·중·일 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완성하였음.
  - EU가 통합되기까지 EC의 사무국이 통합을 이끈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한 것처럼, 동북아 지역의 통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한·중·일 협력사무국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협력에 대한 합의였으나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 하도록 노력해야 함.
  -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문제가 지닌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3국은 유럽의 EURATOM(1952년 설립)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 시킬 필요가 있음.
- ▶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들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는 협력의 제도화에 더욱 집중해야 함.

## 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sup>1)</sup> 개요

■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2011년 5월 21일(토)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음.

-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총리, 칸 나오토 총리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함.
- 특히 각국 정상은 지난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촉발된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평시 협조체제와 긴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였음.
- 3국 정상은 공식회의 하루 전인 21일(토)에 원전사고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지역을 함께 방문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였음.

■ 3국 정상은 주요 합의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Summit Declaration)을 발표하고 재난관리 협력문서, 원전안전 협력문서, 지속가능한 협력문서 등 3건의 분야별 협력을 위한 부속문서를 채택하였음.

-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경제성장,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 인적·문화적 교류, 개발협력, 동북아 정세, 동북아 지역협력, 국제 경제동향 등 3국간 경제협력 문제에서 지역 및 글로벌 이슈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음.

■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마닐라 ASEAN+3 정상회의 시 조찬을 겸한 비공식회의로 시작된 후 ASEAN+3 틀 안에서 개최되어 오다가 2008년부터 3국 내에서 별도로 개최되고 있음.

-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3국 협력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3국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약속하여 3국간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함<sup>2)</sup>
- 2009년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과거 10년간 3국의 협력을 평가하고 3국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3국간 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음<sup>3)</sup>
- 2010년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3차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선언하고 향후 10년간 3국 협력 발전의 비전 및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으며, 2011년 중 3국 협력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협력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sup>4)</sup>

1) 2010년 정상회의부터 한·중·일 3국은 3국이 윤번 개최하는 회의 명칭을 ‘의장국-차기의장국-차차기의장국’ 순으로 부르기로 합의하여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 정상회의’로 표기하기로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자연스러운 내용전개를 위해 순번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함.

2) 정형곤 외(2008),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8-4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 정형곤 외(2010),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논의내용과 평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0-1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Ibid.*

## 2.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주요 결과

- 이번 회의의 주요 합의내용을 담고 있는 정상선언문은 크게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본문에서는 3국간 협력 및 지역·국제문제 부문에 대한 세부적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3국의 관심사를 균형 있게 포함한 것으로 평가됨.
- 전문에서는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강조된 3국간 유대관계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상기하고,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함.
- 또한 3국 협력사무국의 연내 사무국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환영하는 내용과 각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3국 고위급회의에서 아시아 정책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본문의 3국 협력 부문에서는 ①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② 경제성장, ③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④ 인적·문화적 교류, ⑤ 기타 등 5개 분야의 세부 협력내용이 제시됨.
- 지역 및 국제문제 부문에서는 ① 동북아 정세, ② 동아시아 지역협력, ③ 군축비확산, ④ 국제 경제동향 등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방안이 제시됨.

표 1.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의 주요 내용

구분	세부 주제	주요 내용
3국 협력	▶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 재난관리 협력문서 △ 원자력 안전 협력문서 등 2개 부속문서 채택
	▶ 경제 성장	△ 투자협정 △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 △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 물류협력 강화 △ 관세협력 강화 △ 순환경제 시범단지 구축
	▶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	△ 지속가능 협력문서 채택 △ 환경장관회의(TEMM) 결과 승인 △ 2010년 제10차 나고야 생물다양성 협약 총회 결과 후속조치 협력 강조
	▶ 인적·문화적 교류	△ '청소년 미래 포럼' 설립 △ Campus Asia 시범사업의 조속한 출범 △ 교육장관회의 신설 △ 문화교류 강화 △ 3국 문화 콘텐츠 산업포럼 역할 평가
	▶ 기타	△ G20 정상회의 이행 △ HLF-4 부산회의 성공적 개최 기대 △ 개발협력 분야 협력강화 △ 해난구조 분야 협력강화 △ 대태러 협의회 △ 소말리아 해적 퇴치 협력
지역 및 국제문제	▶ 동북아 정세	△ 한반도 비핵화 △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 재확인
	▶ 동아시아 지역협력	△ 미·러 EAS 참여 환영
	▶ 군축·비확산 협력	△ 2010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이행 △ 2012 핵안보 정상회의 성공 개최
	▶ 국제 경제동향	△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 이행

자료: 필자 작성.

## 가.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 3국 정상은 일본 대지진 및 해일 발생을 계기로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과 관련하여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해 3국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담은 재난관리 협력문서 및 원자력 안전 협력문서를 채택하였음.
- 먼저 재난관리 협력문서는 다섯 가지 원칙 및 네 가지 협력 방안을 제시함.
  - 다섯 가지 협력원칙으로는 ① 일국에 중대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긴급 구조팀과 구호물자 지원, ② 재해 발생국은 응급 구조팀 및 구호물자 접수를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협력, ③ 일본 대지진의 교훈과 경험 공유, 향후 이를 재해예방과 재난구호에 활용, ④ 기존의 재난관리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⑤ 재난관리 관련 3국을 포함한 역내 포럼을 통해 긴밀히 협력 등이 제시됨.
  - 네 가지 재난관리 협력방안으로는 ① 관련 훈련 실시 및 역량 강화, ②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순조로운 커뮤니케이션, ③ 원활한 지원 제공 및 접수를 위한 효율적 체제 구축, ④ 재난관리 관련 기술정보 공유 등이 제시됨.
  - 또한 재난관리 실무 워크숍 및 제2차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3국 전문가 공동연구팀의 재해방문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함.
    -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는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 시 채택된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3국 공동 발표문’에 따라 2009년 10월 일본 고베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 원자력 안전 협력문서에서는 원자력 안전 강화의 중요성 및 투명한 원전 운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3국간 협력방안을 제시함.
  - 3국 원자력 안전 규제 책임자 회의(TRM: Northeast Asia Top Regulators Forum on Nuclear Safety) 및 여타 양자 협의체를 활용하여 안전규제 비상사태 대응에 관한 전문가간 협의를 촉진하기로 함.
    - 3국 원자력 안전 규제 책임자 회의는 2004년 8월 발생한 일본의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증대, 중국의 신규 원전 건설 확대 등에 따라 일본 측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08년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10년 11월 까지 총 세 차례 개최됨.
  - 긴급상황에 대비한 조기 통보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가 교류 및 원자력 사고 시 기상분석 및 예측정보를 공유하기로 함.
  - 또한 3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원자력 안전 각료급 회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지를 표명함.

## 나. 경제 성장

- 경제 성장 부문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동반성장은 물론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3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 이를 위해 2010년 개시된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를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하고, 2007년부터 추진 중인 3국 투자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힘.
- 역내 교역량 확대를 위해 물류협력 및 세관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3국간 물류정보를 공유하는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EAL-Net) 구축을 환영하고, 물류장관 회의 등을 통해 3대 물류협력 목표인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친환경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 효율의 조화를 조기에 실현할 것을 약속함.
    - NEAL-Net 구축은 2010년 12월 개최된 한·중·일 교통 물류 발전포럼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한국의 해운항만 물류정보센터(SP-IDC), 중국의 물류정보시스템(LOGINK), 일본의 컨테이너 물류정보시스템(COLINS)을 상호 연계해 선박 입출항 정보와 항만간 컨테이너 이동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3국간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무역 단속 협력, 기타 관세 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다.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

- 3국 정상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가능 성장 협력문서’를 부속문서로 채택하였음.
  -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성과 거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저탄소기술 및 생산물 전파 등을 통해 협력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조사 및 협의 개시를 검토하기로 함.
  - 청정에너지 장관회의, APEC, IPEEC(국제 에너지 효율 협력 파트너십) 등 기존의 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촉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함.
  - 특히 지난해 6월 한국 주도로 설립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3국간 협력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평가됨.
    - GGGI는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성장 방안을 행동 지향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개도국에 전파하는 기구로, 2012년부터 국제기구로서 기능하게 됨.

## 라. 인적·문화적 교류

- 3국 정상은 진정한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앞서 3국간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체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적교류 확대와 역내 문화적 동질화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3국간 활발한 인적교류 확대와 문화 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기로 함.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 미래 포럼’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Campus Asia 사업을 통해 3국 대학간 교류증진을 환영하고, 시범사업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요청하였음.
  - Campus Asia는 제3차 회의 시 제시된 신규 사업 중 하나로 한·중·일 국가의 학생이 상대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대학간 학점교류 및 공동 학위제도 프로그램임.
  - 2011년 제3차 문화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나라 선언(Nara Declaration)’에 따라 문화교류 증진에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2002년부터 추진 중인 ‘한·중·일 문화 콘텐츠 산업 포럼’을 평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로 함.
  - 또한 2012년이 일·중 관계 정상화 40주년 및 한·중 수교 20주년인 점을 고려하여 3국간 문화 및 우호 교류를 특별히 증진시키기로 합의함.

## 마. 기타 및 지역·국제문제

- 기타 부문에서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개발원조 총회(HLF-4: Four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긴밀한 협력, 개발협력 분야에서 3국간 협력 등을 약속함.
  - 또한 2011년 3월 처음으로 개최된 한·중·일 대테러 협력 회의를 통해 3국의 대테러 유관기관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소말리아 해적 대처 관련 3국간 선박호송 협력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 지역 및 국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1~3차 정상회의에서처럼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협력, 군축·비확산, 국제문제 등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것에 합의함.
  - 3국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목표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을 합의함.
  -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해서 3국 정상은 동아시아 협력의 추동자로서 ASEAN의 역할을 지지하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에 미국 및 러시아의 참여를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2010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결과 이행을 위한 협력을 약속함.

### 3. 평가 및 향후 과제

- 한·중·일 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 틀과 연계되지 않은 채 별도로 3국 내에서 4년 연속 개최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음. 이 틀 안에서 3국 정상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게 됨.
  - 2008년 이전까지는 한·중·일 3국이 ASEAN 정상회의에 초청되는 형식으로 참여하여 정상회의를 개최해 왔고 그나마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정상회의가 취소되기도 하면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웠음.
  - ASEAN+3 체제에서 한·중·일은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이 없고, 이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협력 및 통합논의에도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음.
  - 이번 회의는 3월에 발생한 일본 대지진 참사에도 불구하고 취소 또는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개최됨으로써 동북아 협력에 대한 3국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3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협력사무국 출범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상들이 확인하면서 사무국 출범이 보다 가시화되었음.
  - 사무국 설치 문제는 제3차 회의에서 합의되었는데, 이번 정상회의 직전 관련 협정이 발효되고 초대 사무국장이 선정되는 등 일련의 사전절차들이 추진되고 3국 정상이 이를 확인하면서 사무국 출범이 보다 가시화되었음.
  - 향후 협력사무국은 3국간에 진행 중인 많은 협력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됨.
  - EU가 통합되기까지 EC의 사무국이 통합을 이끈 강력한 추진체 역할을 했다면, 한·중·일 협력사무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그 역할을 맡은 매우 중요한 협의체가 될 것임.
- 이번 회의는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VISION 2020’의 협력사업을 현 시점에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지진을 계기로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협력, 에너지 효율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협력과제들이 제시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3국간 협력 및 공동대응의 기반을 마련함.
  - ‘3국 Vision 2020’은 향후 10년간 추진되어야 할 3국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 추진 중인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3국간 FTA 산·관·학 공동연구가 더욱 가속화되어 올해 안에 공동연구가 마무리되고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간 상호학점 인정과 공동 학위과정 개설을 가능하게 하는 ‘Campus Asia’ 사업도 올해 안에 출범하게 됨.
  -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관련 협력사업은 각각 ‘재난관리 기관장 회의’ 및 ‘원전 안전 규제 책임자 회의’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협력문서를 기반으로 이들 협의체의 구속력이 더욱 강화되고 보다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북핵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3국 정상간 소통과 공조체제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됨.

- 이번 회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9·19 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 군축비확산, 동아시아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공동 인식을 높임.
- 또한 국제무대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정치적 위상이 점차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3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3국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지구온난화 문제, 테러 등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해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임.

■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인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협력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 사안은 향후 보다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함.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세부적 논의사항이나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포괄적 범위 내에서 일반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침.
- 재난관리 및 원전안전 협력과 관련해 국가간 사전 정보공유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임.
- 특히 한·중·일 3국의 원자력 협력문제가 지닌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3국은 유럽의 EURATOM(1952년 설립)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형성하여 원자력 발전소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원자력 협력을 주도하게 될 협의체는 원자력 발전소 공동관리 및 핵에너지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 보건기준 수준을 보장하는 역할도 해야 함.

■ 향후 한·중·일 3국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모든 사안들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각국 정상들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함.

- 3국간 협력을 위한 사업들은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 Vision Group) 등을 통해서 많이 제안된 바 있으나, 협력의제 및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각국 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유명 무실해진 경우가 많음.
- 따라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단순히 3국간 협력 프로그램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또한 한국정부는 우리 측에서 제시한 협력과제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함.

- 3국 협력사무국 구축, Campus Asia 사업 추진 등 한국이 제시한 의제들에 대한 실천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음.

- 특히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3국 협력사무국은 향후 3국간 협력을 심화시키고 지역통합체로 이끄는 추진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구 운영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한·중·일 정상회의가 정착되고 각종 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이번 정상회의와 김정일의 방중 일정이 겹친 것에 대해,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9·19 성명 이행 등을 통한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동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지지하는 등 진정성이 없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음.
- 이처럼 한·중·일 3국간에는 북핵문제 이외에도 과거사 문제, 영토분쟁 등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3국간 협력 추진의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음.
- 이를 방지하고 3국이 공동 성장번영하기 위해서는 3국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키고, 각종 갈등요인이 3국 정상회의 및 각종 협력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3국의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됨. **KIEP**